

# “5·18 왜곡 국방부 차관 사퇴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주석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범죄조직이다. 왜곡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던 서 차관에게 5·18 진실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1988년 5월11일 발족한 511연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청문회(13대 국회) 대응 문서를 만들었던 군 비밀조직이다.

서 차관은 1988년 당시 511연구

## 광주 시민사회단체, 옛 전남도청서 기자회견

### “특조위 보고서 내용 왜곡 경위도 밝혀야”

위원회 전담 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신군부의 대응 논리(자위권 발동 등)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사에 대해 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511연구위원회가 계엄군의 체함수기 내용을 왜곡(실탄 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 등)한 점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특조위는 511연구위원건에서 이름과 역할이 발견된 서 차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보고서 초안에 기록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며 “자료 이관을 목적으로 구성된 5·18 특조위 후속조치반은 취지와 달리 서 차관을 감싸기 위해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5·18 왜곡·편향의 출발점은 서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라며 “서 차관은 ‘연구원 3

년차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5·18 왜곡에 참여한 사실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5·18특조위 보고서 내용 왜곡 경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서 차관은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시 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등 지회가 참여했다.

최남규 기자

## 높은이자미끼 사기 행각 2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돈을 빌려주면 2주 뒤 20~3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8명에게 5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과 채무 변제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으며, 특정 인터넷방송 후원금으로 4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원금 일부를 갚은 뒤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2년 간 99명으로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3억8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한 뒤 여죄를 조사 중이다.

## 광주 주택가서 중국인 흥기에 쫓겨 경찰 수사

광주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중국인이 흥기에 쫓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4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국 국적 A(30)씨가 지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휘두른 흥기에 쫓겼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27분께 용의자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왔으며, 다행히 과정에 피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동거인 2명과 함께 A씨 집 근처를 찾아 범행을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와 용의자가 3개월 전 공사장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최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택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40대 중국인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또 동거인의 범행 가담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택 기자

## 주운 지갑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군인 검거

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PC방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군인 A(20)씨를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에서 B(22)씨가 화장실에 두고간 1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현금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피해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PC방 사용기록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붙잡았으며 사건 기록 등을 헌병대에 넘겼다.

## 수역원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수역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심모(45)씨를 구속하고, 일당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4차례에 걸쳐 5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뒤 1건당 100만~2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은 심씨와 공모자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심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어려운 돈 만들어 드립니다’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모자를 모집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 금감원-금융권, ‘금융범죄’ 공동 대응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보이스 피싱 등 막대한 금융범죄 피해자를 야기하는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 등 21개 금융유관기관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보이스 피싱에 의한 대국민 피해가 확대되는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질 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고, 범죄단체가 조직화·국제화하면서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처가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협의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경우 피해 예방 활동수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업권별 연수원을 통한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협의체 차원에서는 금융범죄 의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범죄 단속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흥보 동영상 제작 등 전국민 피해 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열정의 불꽃 2018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열린 4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용접 직종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 ‘사조직 결정·SNS 지지호소’ 불법선거운동 현직 교사 고발

전남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현직 교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안도 모 고교 교사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입후보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를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에게도 A

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2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등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

는 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